

# 04

## 복지·고용노동

### 1.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

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☎ 044) 202-2515

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입니다.

- 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
  -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,
  -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하였습니다.
-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#### 2016년도 국가암검진 시행 내용

- 추진배경      암검진 권고안 개정에 따라 관련 변동사항 반영
- 주요내용      간암 검진주기 1년에서 6개월로 조정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기준 30세에서 20세로 조정
- 시 행 일      2016년 1월

## 2.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☎ 044) 202-2745

암·심장·뇌혈관·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
-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, 지난 3년간 검사·시술·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.

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,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.

- 우선 1월부터 암, 희귀난치질환의 진단, 약제 선택, 치료 방침 결정 등 “환자 개인별 맞춤의료”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
아울러,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\*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\*\*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

\* 희귀질환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, 질병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

\*\*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,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

### 2016년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

- 추진배경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
- 주요내용
  - ① 2016년 1월부터 암·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
  - ② 2016년 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
  - ③ 2016년 4대 중증 초음파검사,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(연중)

## 3. 보건의료자원(인력, 시설, 장비) 신고일원화 시행

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☎ 044) 202-2780, 2774

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·폐업,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됩니다.

-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·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복하여 신고하던 사항을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 -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,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-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###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개요

- 추진배경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자원 신고체계를 일원화하여 자원관리의 효율과 중복신고 개선
- 주요내용
  - ① 신고일원화 대상사업(13종)
    -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(8종): 의료기관 휴(폐)업 신고, 약국 휴(폐)업 신고,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(재사용) 신고,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·양도·폐기등 신고,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,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,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통보,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
    -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(2종): 의원급 대진의 신고,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
    -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(3종): 의료기관 개설·변경신고(허가), 약국개설등록신청,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인력·시설 상세현황,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 신고
  - ② 법령 개정(5개): 국민건강보험법·의료법·약사법 시행규칙,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,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  - ③ 서식 표준화(20종) 및 신고시 증빙서류 생략(31종)
  - ④ 통합신고포털 및 유관기관 면허·처분정보등 연계(13종)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## 4.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(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)

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☎ 043) 719-6839

2014년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 
2016년 ‘자궁경부암 예방접종’이 추가됩니다.

-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‘자궁경부암 예방접종’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.

※ 2015년 14종 백신 → 2016년 15종 백신 지원(자궁경부암 예방접종, 상반기 중 추가 예정)

-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자궁경부암 백신接种의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2016년 상반기 안내 예정

※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(<http://nip.cdc.go.kr>) 사이트에서 검색

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 >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시행 (2016년 상반기 보도예정)

###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확대

2016년도 지원 백신(15종)

BCG(피내용), B형간염, DTaP(디프테리아/파상풍/백일해), IPV(폴리오), DTaP-IPV(디프테리아/파상풍/백일해/폴리오),  
MMR(홍역/유행성이하선염/풍진), 수두, 일본뇌염(사백신), Td(파상풍/디프테리아), Tdap(파상풍/디프테리아/백일해),  
Hib(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), 일본뇌염 생백신, 소아폐렴구균, A형간염, 자궁경부암

## 5.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
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☎ 044) 202-3052

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,  
201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(4인가구 기준)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,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.

-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도부터는 127만원\*으로 인상되어,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됩니다.

\* 2015년 상반기(개편 전) 대비 21% 증가(약 105만원 → 127만원)

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> 알림 > 보도자료 > 기초생활보장제도, 2016년 기준 중위소득 4% 인상

###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

■ 추진배경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

- 주요내용 ① 2016년 기준 중위소득 : 2015년 대비 4% 인상  
- 4인가구 기준 (2015년 7월) 약 422만원 → (2016년) 약 439만원  
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의 (2015년)28% → (2016년)29%로 확대  
- 4인가구 기준 (2015년 7월) 약 118만원 → (2016년) 약 127만원

■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## 6.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(my job)키움통장 지원 확대

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☎ 044) 202-3072, 3077

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'내일키움통장'이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 지원이 추가됩니다.

- EITC(근로장려세제)가 기초수급자까지 확대(2014년 1월 1일)됨에 따라 기존 자활장려금\*은 없어지고, 근로유인을 위한 장려금 제도가 EITC 중심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.

\*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지급(2000년~)

- 2013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단 매출액으로 지원해 온 '내일키움통장'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·창업(탈수급 포함) 경우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\*합니다.

\* (지원수준) 1:1 매칭 지원, 월 5만원 또는 10만원

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 > 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(2016년 상반기 보도 예정)

### 내일키움통장 정부 지원 확대

- 추진배경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
- 주요내용
  - ① 본인 저축액에 정부 매칭금 추가 지원
    - (기존)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(5/10만원) + 수익금 (0~15만원)
    - (변경)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(5/10만원) + 수익금 (0~15만원) + 내일키움통장 정부 매칭금 (5/10만원)
  - ② 가입대상 확대
    -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까지 가입대상 확대(25천명 → 30천명)
- 시 행 일 2016년 3월

## 7.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

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☎ 044) 202-3125

읍면동에서 위기가구를 찾아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.

-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\*를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·복지·고용·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·제공합니다.

\* '통합사례관리'란 ①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④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

-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최일선 읍면동에 전진 배치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 합니다.
-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하여 그동안 주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 이동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한편 시군구는 욕구와 문제가 심각하여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가구를 직접 관리하고 읍면동의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.

이를 위해 2016년에는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합니다.

- 사업비는 대상자에게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, 서비스가 연계 될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, 생활지원비,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사례관리회의비 등으로 지원됩니다.

## 8.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☎ 044-202-3347

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, 부모심리상담서비스,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·확대 제공될 계획입니다.

-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.
-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여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.
-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려(5억원→10억원)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, 병원·은행 이용,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입니다.(10억원→15억원)

### 2016년도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확대 사항

- 추진배경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
- 주요내용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규설치(17개소, 개소당 4.7억)  
행동발달증진센터 신규설치(2개소, 개소당 4억)  
가족휴식지원 서비스 예산 2배 확대(5억→10억)  
공공후견서비스 확대(10억→15억)
- 시 행 일 2016년 4월 이후

## 9.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☎ 044) 202-3341

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,500명 확대하고,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,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‘최중증장애인’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.2% 인상(2015년 8,810원 → 2016년 9,000원)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.

### 2015년도 장애인활동급여 신청자격 확대 사항

- 추진배경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강화
- 주요내용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확대 (5.75만명 → 6.1만명)  
활동보조가산급여 신규 지원 (최중증 독거·취약 등 장애인 대상)  
활동보조단가 인상 (8,810원 → 9,000원)
- 시 행 일 2016년 1월

## 10.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

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☎ 044) 202-3367

‘노후준비지원법’ 시행(2015년 12월 23일)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‘노후준비서비스’가 시행됩니다.

- “노후준비서비스”란 :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, 건강, 여가,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

서비스 대상을 ‘전 국민’으로 확대하였으며, 서비스 영역도 재무 뿐 아니라 건강, 여가,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하고, 진단, 상담, 교육, 연계,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

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> 알림 > 보도자료 > 체계적인 노후준비, 국가가 도와드립니다

### 노후준비서비스 개요

- 추진배경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필요성이 증대

- 분야별 주요서비스 재무, 건강, 여가, 대인관계 등

|      |  |
|------|--|
| 재무   |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자원관리 방안 제시    |
| 건강   |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실천방안 제시         |
| 여가   | 여행, 평생교육, 취미활동,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정보 제공     |
| 대인관계 | 배우자, 자녀, 형제·자매와 건강한 소통을 위한 갈등관계 대처법 소개 |

- 이용방법 온라인 (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코너를 통해 이용)  
오프라인 (국번없이 1355로 전화, 전국 107곳에 있는 지역센터 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 센터 방문 이용)

- 서비스 제공 절차 (1단계) 진단지 자가측정을 통한 노후준비 수준 파악 및 분야별 (재무·건강·진단·여가·대인관계) 취약점 파악 ⇒ (2단계) 노후설계상담사의 전문상담 및 교육 ⇒ (3단계)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유관기관으로 연계 ⇒ (4단계) 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행태 변화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

- 시행일 2015년 12월 23일

## 11. 아동발달지원계좌,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

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☎ 044) 202-3417

2016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3세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2015년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로 한정하여 문제가 있었으나,
  -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3세로 확대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% 기준 (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)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

### 아동발달지원계좌, 기초수급가구아동 가입 연령 확대

- 추진배경 대상 범위 확대로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
- 주요내용 ① 2016년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대상 : 만 12세 (2004년생) → 만 12세 (2004년생), 만 13세 (2003년생)  
②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기초수급가구 기준 변경 : 생계, 의료 급여
- 시행일 2016년 1월



## 12.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

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☎ 044) 202-3413

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연장하여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2015년도에는 국내 입양한 가정에 만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15만원씩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.
- 2016년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만 16세 미만까지 월15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.

###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만16세미만으로 확대

- 추진배경 양육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입양가정의 경제적 지원 강화
- 주요내용 국내입양 가정에 만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15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연령을 확대하여 만 16세 미만까지 지급하도록 함
- 시 행 일 2016년 1월

## 13.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

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☎ 044) 202-3459

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됩니다.

- 2015년에는 약 3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, 2016년에는 대상자를 3.8만 명으로 늘려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2016년부터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, 서비스 해지자에 대한 환급방법이 구체화되어 제공됩니다.

-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게는
  - (본인부담금 과입금 시)“행복e음” 통해 요청(시군구)하면, 사용되지 않은 본인부담금 환급
  - (사업연도 종료 시)다음연도 본인부담금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이월
- 서비스 해지자에게는 서비스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자동 환급 실시

바우처카드 발급 횟수가 많아지면서, 서비스 대상자 카드발급 기간이 단축됩니다.

- 바우처카드 월 발급 횟수가 기존 5회에서 매주 월·목요일 8회로 확대되면서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가능 대기 시간이 짧아집니다.

## 14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

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☎ 044) 202-3475

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입니다.

- 사업규모를 2015년 33.7만명(추경제외)에서 2016년 38.7만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, 지원봉사, 민간 취업·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합니다.
- 특히, 공익활동 참여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일원화하고 취업·창업활동도 대폭 늘려 (3.8만명 → 4.9만명) 민간형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 (1,929명 → 2,318명)하고 인건비를 인상(월 117만원 → 월 126만원)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.

###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계획

- 추진배경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
- 주요내용 ① 공익활동 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일원화  
② 취업창업활동 확대(3.8만명 → 4.9만명) 및 고령 근로자 사회적 인식 개선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## 15.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

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☎ 044) 202-3458

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‘전국가구 평균소득 40%(4인 기준, 1,990천원) 이하’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, 2016년부터는 ‘기준 중위소득 60%(4인 기준, 2,635천원) 이하’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

###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개요

- 추진배경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 통증에 시달리나,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 경감 및 삶의 질 개선
- 지원대상 아래 ① ~ ③ 모두 충족 시  
① 연령: 만 65세 이상  
② 대상질환: 건강보험급여 ‘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’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  
③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지원범위 검사비, 진료비,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% (최대 100만원)  
※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
- 신청절차 시·군·구 보건소에 신청 → 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 대상자 확정, 의료기관에 수술의뢰 및 지원금 지원
- 시 행 일 2016년



## 16.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

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☎ 044) 202-3569

시간제보육반을 2016년에는 전국 38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기관(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)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입니다.
- 2015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230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, 2016년 추가로 150개 반이 문을 엽니다.

(참고)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> 어린이집 > 시간제보육사업

###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

- 추진배경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
- 지원대상 ① (개요)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, 지정된 제공기관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방식  
② (이용료) 시간당 4,000원 중 기본형 2,000원 (월 40시간까지), 맞벌이형 1,000원 (월 80시간까지) 본인부담  
③ (제공기관) 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
- 시행일 2016년 1월

## 17.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

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☎ 044) 202-3633

둘 이상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,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.
  - 2016년에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,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,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.
  -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, 보험료의 50%는 본인이 부담하고 50%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.

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> 알림 > 보도자료 > “시간제 근로자, 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반으로 줄어든다.”

###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

- 추진배경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
- 주요내용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 완화  
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
- 시행일 2016년 1월 1일

## 18. 위조·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

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☎ 044) 202-2487

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여, 위조·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·불법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
  -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하여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,
  -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하여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.
- ※ 제약·수입사는 2016년 7월, 의약품도매상은 2017년 7월부터 보고 의무화

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의약품유통경로한눈에본다

### 일선수협 투명경영 추진 계획

- 추진배경 위조·불법약품 사전 차단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한 일련번호 제도 시행
- 주요내용
  - ①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
    - 2015년 생산·수입 품목부터 단계적 부착→2016년 생산·수입되는 전문의약품 전체
  - ②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(출하 시)
    - 제약·수입·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공급한 익월말까지 공급내역(가격·수량 등) 보고→2016년부터 제품을 출하하는 경우 일련번호 등 정보 보고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(2015년 11월 11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)

## 19.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

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☎ 044) 202-2587 | 보험약제과 ☎ 044) 202-2755

20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(짜먹는약)와 정제(알약)도 포함되어 보다 편리한 복용이 가능해 집니다.

-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(가루약)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습니다. 따라서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, 영·유아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.
-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입니다.
- 20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하여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하여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

## 20.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

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☎ 044) 202-3161

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입니다.

-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,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전, 단수, 건강보험·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 정보를 수집·분석하여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하였으며, 201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.
  - 이를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, 일반 국민에게는 누락될 수 있는 복지급여·서비스 수급권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  - 또한, 동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,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.

### 2016년도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지원 강화

- 추진배경 사각지대 소외계층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 강화로 복지급여 수급권 강화
- 주요내용
  - ① 단전, 단수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대상자 선제적 발굴
  - ②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력을 시스템으로 지속 관리
  - ③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책방안 마련

## 1. 피크임금 대비 10%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,080만원까지 지원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☎ 044) 202-7456

60세 정년제 실질적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.

- 지금까지는 10~20%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 6,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하였습니다.
  - 2015년 12월 이후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%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 소득 7,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,08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.
- 또한,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확대 여력 확보를 위해 「근로시간단축 지원금」을 지원합니다.

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피크임금 대비 10%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,080만원까지 지원

###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

- 추진배경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
- 주요내용
  - ①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기간 한시 연장(2015년 말 → 2018년 말)
  - ②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요건 완화(임금감액률 10%~20%→10%)
  - ③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(주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감소임금 일부지원)
- 시행일 2015년 12월

## 2. “아빠의 달”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☎ 044) 202-7472

일·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“아빠의 달”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
- 2015년까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%(최대 150만원)를 지원하였으나,
  - 2016년 1월부터 지급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하여 1개월 최대 150만원이던 것으로 3개월 45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한편, 이 급여는 20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한 배우자(근로자)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(참고) 고용노동부홈페이지 > 정책마당 > 대상자별정책(여성) > 일가정 양립 지원

### “아빠의 달”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확대

- 추진배경 일·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
- 주요내용 “아빠의 달” 급여지급 기간 확대(1개월→3개월)
- 시 행 일 2016년 1월

## 3.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

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☎ 044) 202-7529

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,030원으로 인상됩니다.

-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,240원,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으로 월 1,260,270원 (6,030원×209시간) 입니다.
-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·일용직·시간제 근로자,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.
-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,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  - 또한,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(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)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(시급 5,427원)할 수 있습니다.

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e고용노동뉴스 > 보도자료 > 고용노동부, '1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,030원으로 결정

## 4.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축소 (대기업 80만원 → 60만원, 중소기업은 종전과 동일)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☎ 044) 202-7479

의무설치사업장의 인건비 지원 금액은 축소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대기업에 한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을 80만원 → 60만원으로 축소 지급합니다.

-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, 동 지원금액 조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(참고) 1.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: 1명당 월 600,000원 (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,200,000원)

2.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: 1명당 월 500,000원 (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,050,000원)

3.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경우: 1명당 월 400,000원 (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750,000원)

4.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경우: 1명당 월 300,000원 (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50,000원)

## 5. 해외취업 연수 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등

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☎ 044) 202-7494

각 국가별 취업 유망직종을 대상으로 (가칭)청해진 대학을 운영하고,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취업성공장려금 및 민간취업알선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IT, 건축, 금융 등 전문 직종 중심으로 “직무+어학+문화·생활” 습득을 지원하는 (가칭) 청해진 대학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.
  - 이에 따라 2016년에는 10개 대학 2백여명을 대상으로 신규 공모를 통해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
  - 또한 K-Move 스쿨은 3개월~4개월의 단기과정에서 내년부터 취업성도가 높은 6개월~12개월의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편합니다.
-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에 진출하는 청년에 대하여 도전정신을 격려하기 위해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2016년에는 400만원으로 확대하고
  - 해외취업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취업알선지원금은 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2016년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.

### 2016년도 (가칭) 청해진 대학 운영계획

- 추진배경 IT, 기술분야 등 인력이 부족한 틈새 시장에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기 연수를 통해 해외 진출 확대
- 주요내용 ① IT, 건축, 금융 등 전문 직종을 중심으로 학과 또는 과정을 선정하고 장기지원(최대 2년)으로 확대  
②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(학과 또는 과정)을 선정, 중장기적으로 통합 프로그램 (기술+어학+문화+생활정보)를 지원
-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 중(잠정)

## 6. 청년취업인턴제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

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☎ 044) 202-7446

미취업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기업 대상을 우량 중소기업·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

- 2015년 상반기까지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, 2015년 하반기부터 중견기업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2015년 하반기 강소·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가 1.5만명 (2015년 중소기업은 3만명)이었으나, 2016년부터는 강소·중견기업의 채용 목표를 3만명 (중소기업은 2만명)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- 또한,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개편하였습니다.

### 정규직 전환지원금 개편내용

- (2015년) 인턴 수료하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총 390만원 지원  
→ (2016년) 인턴수료하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95만원,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95만원 각각 지원 (총 390만원)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## 7.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 부담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☎ 044) 202-7483

201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.

-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에서 최대 1,260,270원 (월 최저임금액) 까지 부과됩니다.
-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(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)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,  
- 2016년의 경우 2월 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·납부 (전자신고는 <http://www.esingo.or.kr>) 하여야 합니다.

(참고) 고용노동부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알려드립니다 > 공고 >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결정 고시

###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

-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
- 주요내용 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
  - 의무고용인원 대비 3/4이상 고용: 757,000원
  - 의무고용인원 대비 1/2~3/4미만 고용: 832,700원
  - 의무고용인원 대비 1/4~1/2미만 고용: 908,400원
  - 의무고용인원 대비 1/4미만 고용: 984,100원②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: 1,260,270원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(잠정, 행정예고 중)



## 8.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☎ 044) 202-7483

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
-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2016년부터 10만원 (50만원 → 60만원) 인상합니다.
- 참고로,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

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법령정보 > 훈령,예규고시 >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

###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

- 추진배경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활성화 지원
- 주요내용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## 9.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☎ 044) 202-7561

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.(2016년 1월 21일)

- 지금까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단위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,
  - 대기업과 중소기업, 산업단지 입주 기업,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해집니다.
- 또한, 도입 활성화를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출연비용의 50%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, 근로복지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
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법령정보 > 최근제개정법령 >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

###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

- 추진배경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단위에서 설립하도록 되어있어 규모의 경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공동기금 설립 필요성 제기
- 주요내용 ①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 
②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,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등 둘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하여 근로복지사업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(매칭방식)
- 시 행 일 2016년 1월 21일